

역사수상

# 국채보상운동과 IMF '금모으기운동' 의 허구성

이 상 찬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

## '국채보상운동' 의 전말

작년 말 이후 금 모아 수출하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1907년에 전개되었던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다. 금모으기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이 외채를 갚으려는 같은 목적을 가진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빚 1,300만 원(원금 1,150만 원, 이자 150만 원)을 갚기 위해 1907년 2월 중순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 각지에서 약 1년 동안 계속되었다. 20여 개의 관련 단체가 조직되었고, 국

왕으로부터 전현직 고위관리, 상인(민족자본가), 지식인, 부녀자 등 상층민과 농민, 노동자, 기생, 백정 등 하층민까지 골고루 참여하여 군(郡) 단위의 모금운동이 전개되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담배를 끊거나 반찬을 줄여 그 돈을 보내거나, 그냥 돈을 내거나 폐물을 보내었다. 그 결과 1907년 5월 말까지 약 230만 원이 모금되었다(19만 원 정도라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 기간의 모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일제는 이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빚을 갚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권 회복에 있다고 파악하였다. 때문에 이 운동에 대해 온갖 방해와 탄압을 가

하였다. 여기에다 지도부의 분열과 배신으로 그나마 거둔 돈마저 제대로 쓰지 못해 목적인 바를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이러한 국채보상운동을 두고 국민의 애국정신 고양, 전국민의 참여와 전국적 전개, 여성의 참여(여성의 각성과 해방에 기여), 일제 경제침략에 대한 저항, 민립대학 설립운동으로의 발전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말한다.

국채보상운동은 국가의 위기 극복과 외채상환이라는 점에서 보면 외견상 그럴 듯해 보인다. 그래서 이 운동의 실패에 대해 우리는 짙은 아쉬움과 후회를 토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나라빚을 갚으려 한 국권 회복운동이었으나, 국민적 결집에 위협을 느낀 일제의 방해와 탄압에 의해 지도부가 분열되고 무너짐으로써 나라빚을 갚지 못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는 식이다.

### 담배끊어 갚을 수 있었을까

과연 일제의 방해와 탄압이 없었다면 이 운동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고 국권을 회복하려 하는 운동이라면 일본의 방해와

탄압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였다. 일본의 방해와 탄압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채보상운동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은 해명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담배를 끊고 모은 돈으로 과연 외채를 다 갚을 수 있는가? 즉 담배를 끊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외채를 갚는 데 왜 일반 국민이 나서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어떤 방법으로든 누가 갚든 간에 외채를 갚기만 하면 국권을 회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당시 국채보상 발기 취지서를 보면 “국채를 갚는 방법으로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폐지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이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취지서는 국왕과 정부 고위관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은 것으로 보아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일반 국민에게 국가의 위기상황을 전달하는 데는 상당한 호소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담배를 끊고 돈을 모으는 것

이 국채보상운동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빚을 갚는 데 적당한 방법은 아니었다. 담배값을 아껴 모든 빚을 갚을 만큼 돈을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빚이 계속 늘어나는 상태였기 때문에 담배값을 아껴 모으는 정도로 빚을 갚기는 불가능하였다(이어나 갚을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 대한 부채는 1910년까지 계속 늘어나 4,500만 원에 달하였다. 이렇게 늘어나는 빚을 하층민들의 푼 돈이나 금가락지, 금비녀나 모아서 과연 갚을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당시 국채보상운동에는 지금의 금모으기운동과 마찬가지로 상층민, 귀족, 명문가, 부호 등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였다고 한다. 따져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빚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았다면 아마도 상층민, 귀족, 명문가, 부호 등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목돈을 마련하려면 이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담배를 끊어 그 돈을 모으자고 했을까? 당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담배를 끊는 것이 영업에 손상이 없고, 위생에 해롭지 않

으며, 담배가 원래 먹고 마시는 것 중에서 긴히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용상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국권이 넘어가면 2천만 동포가 모두 노예가 될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별다른 고통을 치르지 않고서도 빚을 갚고 국권을 도로 찾아올 수 있을까? 이 점과 관련하여, 같은 때에 의병들은 일본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던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수많은 의병들이 목숨을 바쳤어도 얼마 안 있어 일본에 ‘합병’ 당하고 말았는데 별다른 고통을 치르지 않고서도 국권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차라리 담배 끊은 돈을 의병들의 군자금으로 대주었다면 어땠을까?

그 많은 빚은 누가, 왜 졌을까?

국채보상 취지서에는 “국고로는 도저히 상환할 능력이 없으며... 일반 국민들은 의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 국채를 모르겠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정세에 비추어 보아 이것을 갚지 않겠다고는 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이야



▲ 국제금융위기 타개를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여 해결하려 했던 '금모으기운동'

기는 비약이 너무 심하다. 국고로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만 하였지 왜 갚을 능력이 없는지, 일본에서 들여온 빚은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누가 가져다 썼는지(빚을 가져다 쓴 사람이 일차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닐까)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다. 1,300만 원의 부채는 1905년 1월부터 1906년 2월 사이에 들여온 것인데, 그때는 갚을 능력이 있어서 들여온 것인지, 갚을 능력이 있었다면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갚을 수 없게 된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이며 도대체 누가 잘못된 것인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거

액의 부채는 누가 왜 들여왔는지 하는 것들이 짚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나라빚인지, 정부빚인지, 국민의 빚인지가 가려질 것이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돈이라고는 단 한푼 구경조차 못한 일반 국민들이 그 빚을 갚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또한 당시의 취지서를 보면 “국채 1,300만 원은 바로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은 필연”이라는 말이 있다. “국채를 빨리 갚아 자유국민 되어보세”라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나

라빛을 갠 후에는 온전한 자유를 차지하여 분명한 독립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인도 있었다. 나라빛이 망국과 관련된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1907년 당시에는 나라빛 상환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제국이 이미 망해가고 있었다는 점, 국채를 아무리 빨리 갠다고 독립국의 '자유국민'은 결코 될 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905년 11월 17일 일제에 의해 을사조약이 조작·강요되었고, 이 조작·강요된 을사조약에 의해 1906년 2월 1일부터는 통감부가 설치되어 일본인 통감이 부임해왔다. 통감부 설치로 한국은 일본에게 외교권을 위탁하는 이른바 '보호국'이 되었다. 이러한 보호국화는 외채도입과 직접 관련이 없다. 외채를 갠 것과 일본으로부터 외교권을 돌려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통감부는 외교권만 장악한 것이 아니었다. 1906년 3월부터는 '시정개선'이라는 이름 아래 대한제국의 국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고, 1907년까지 일본인 경찰 2천여 명이 한국에 배치되었다. 보상금 모금이 한창이던 1907년 7월 중순, 일제는 마침내 고종을 황제자리에서 강제로 쫓아냈다. 동시에 7월 24일의 정미조약

에 의해 정부 각부에는 일본인 차관이, 각도에는 일본인 2인자가 들어와 실권을 장악하였다(각부 대신과 각도 관찰사는 대개 친일파였다). 7월 31일에는 우리나라 군대가 강제 해산당하였다(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 이후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일본군에게 실질적으로 점령당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광산과 논밭이 일본인들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빛을 갠기 위해 모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빛을 들여오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직접침략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국정 전반을 일본인에게 장악당하고 나라살림을 통제로 빼앗긴 상태에서 빛을 갠다고 해서 다시 독립국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설령 1,300만 원의 빛을 모두 갠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망하는 나라에서 빛을 갠다면 그나마 갠 만큼의 부만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뿐이었던 것이다.

물론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빛은 대한제국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대한제국을 빛에 휩쓸려버리는 일본의 철저한 계산 아래 억지로 떠맡겨진 것이었다. 때문에 1,300만 원을 다 갠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더 많은 빛을 또다시 떠안길 것이 분명하였다.

일본이 강요한 이 빚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침략의 더 중요한 과정(보호국화, 국정장악, 황실의 무력화 등)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결국 국채보상운동은 부채상환과 전혀 관계없이 식민지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구상되었고, 부채도입 책임자 처벌과 부채 사용자에게 의한 상황이 당연한 것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한 채 부채상환이 국민의 의무라는 비약된 논리 아래 전개되었다. 담배 끊은 돈을 모아 빚을 갚는다는 것 역시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일부이긴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돈을 내가 썼나? 남이 쓸 때라도 한푼이나 구경하였나? 왜 우리더러 물라고 하는가? 무슨 돈을 일천삼백만 원씩이나 차관하여서 다 무엇에 썼나? 우리가 추렴내어 물어주면 재미가 있어 또 자꾸 차관만 하게 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전국 각지의 국민들, 특히 하층민들의 참여가 대단한 것은 사실이었다. 품삯을 갖다 내는 노동자들, 소 판 돈을 전부 갖다 내는 농민들, 매향나무

와 짚신 판 돈을 갖다 내는 사람들, 머리를 잘라 판 돈을 내는 여인들. 이들은 하루빨리 빚을 갚아 나라를 다시 찾아오겠다는 순수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야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 지식인·언론의 역할과 한계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지식인과 언론의 역할이 물론 컸다. 당시의 신문이나 학회지들은 이 운동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논설을 수없이 실었고, 관련 단체가 설립될 때마다 취지서와 대표자를 광고해주었으며, 이 야깃거리가 될 만한 내용들을 열심히 기사화하였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직접 돈을 받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신문과 각종 학회의 기관지와 잡지들이 눈물 겹도록 찡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하였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까지 덮어둘 수는 없다는 점이다. 당시의 신문과 잡지가 커다란 해악을 끼친 것 또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언론과 지식인은 무엇을 잘못하였을까? 국가가 위기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만 강조하였지, 국가를

위기상태로 몰고간 장본인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를 논의하지 않았다. 빚을 갚아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도 빚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거나, 국고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 외에 기껏해야 “부모가 빚을 산더미같이 저서 빚쟁이가 식구를 다 내쫓는다든지 전답을 빼앗아간다든지 하면 그 아들 여러 형제가 있는데 그 돈을 내가 아니 썼다든지, 쓰는 구경도 못하였다든지, 쓰지 아니할 데 썼다든지 하고 그 빚을 아니 갚아야 옳겠소”라고 말하는 정도였다. 막연한 국가의식과 애국심만 떠들어대며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만 주위 삼켰을 뿐이었다.

특히 국채보상운동 지도부에는 전 현직 고위관리와 개화파 인사가 다수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국가를 위기상태로 몰고간 장본인들이거나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부채에 의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전 현직 고위관리들은 국가를 위기상태로 몰고간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국채보상운동의 지도부에 참여함으로써 마치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는 것처럼 비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은

이들이 운동을 지도할 자격이 없고 오히려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했음에도 그러지를 못하였다.

개화파 인사들 중 상당수는 친일파였는데 이들은 일본의 침략과정에서 부를 축적했거나 출세한 인물들로서 일본으로부터 빚을 들여오는 것에 대해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일찍부터 문호개방과 일본의 명치유신을 모델로 한 근대화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근대화라며 반색하던 사람들이었다. 결국 개화파의 근대화론은 일제의 침략을 묵인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로 결말지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시점에서는 빚을 갚는 문제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인 자주적 근대화가 논의되어야 하고 동시에 개화파의 근대화론을 반성하여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언론은 친일파 인사 또는 개화파가 제기한 근대화론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 부각시키지 못하였다.

일부 언론들이 운동 초기에는 국채보상운동의 문제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짚고 있었지만 끝까지 그 입장을 유지, 발전시키지 못했던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

우 애초에는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었다가 얼마 후 긍정적이 되고, 결국에는 의연금을 접수하는 등 운동의 중심에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 역사에서 얻는 교훈

어쨌거나 국채보상운동에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앞서 지적된 국채보상운동의 문제점은 금모으기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금모으기운동으로 외채문제 또는 달러 부족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금 보유량이 얼마이고, 얼마만 모아 수출하면 외채를 갚을 수 있다고 선전된 적이 있다. 그러나 외채문제 또는 달러 부족사태는 경제정책이나 금융정책의 변화에 의해 산업구조가 안정되고 우리나라의 부가 증가할 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금을 달러로 바꿔온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게다가 현재의 금모으기운동에는 국채보상운동과 마찬가지로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금반지나 목걸이, 팔찌 등을 모아 수출해 봐야 그 액수는 미미할 것(2천억에 달하는 외채의 1년치 이자

나 갚을 수 있을까)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금모으기운동을 계속해야 한다면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따라서 모으기 효과가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자도입에 의해 혜택받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얼마나 혜택받았는지를 밝혀내고, 그들이 현재의 위기를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밝혀내지는 못하지만, 재벌 특히 30대 재벌들이 외자도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혜택받은 재벌들은 계열회사를 처분하는 사재를 처분하는, 가지고 있는 금을 모으는 책임지고 현재의 위기를 타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화파의 근대화론이 결국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귀결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60년대 이후에 추진된 근대화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와 정책 담당자들의 잘못은 무엇인가를 비롯하여 외자도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외세에 의한 종속화)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짚어보지 않은 채 단순히 생각해서 외채상황이 순조롭게 끝나면 현재의 위기가 끝나고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자립이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다시 한번 위기에 부딪칠 수도 있고, 어쩌면 경제적 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지도 모른다.

넷째, 언론과 지식인들은 외세와의 종속화, 외자도입에 의한 근대화와 재벌의 비대화, 재벌들이 현재의 위기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 등에 입각하여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금모으기운동을 주도한 재벌 중의 하나지만 삼성그룹이 오늘날의 위기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인데, 만약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삼성이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쳐두고 금모으기운동에 참여한 사실만 주목해서는 안될 것이다(삼성이 금모으기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일반 서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금모으기운동이 실질적으로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금수출은 오히려 우리의 부를 쓸데없이 해외로 유출하는 것으로서 정작 긴급히 써야 할 상황에서 금 부족으로 애를 먹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서 금모으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애국심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슨 돈을 이천억 달러씩이나 빚을 내다가 다 무엇에 썼나? 그 돈을 누가 썼나? 서민들은 미국돈을 한 푼이나 구경하였나? 왜 서민들더러 금 팔아 갚자고 하는가? 서민들이 금 팔아 물어주면 재미 붙인 재벌들은 또 자꾸 빚만 얻어올 것을...”

국채보상운동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론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마디한다. “부모가 빚을 졌을 때 아들 형제들이 갚아야 한다”는 말은 관리나 재벌들이 들으면 솔깃할 만하다. 그러나 지금은 빚을 조금 지긴 했지만 아주 파산한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자식들의 의무만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강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부모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를, 부하직원들을 정말로 아들 딸처럼 생각한다면 이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금모으기운동을 전개하여 초점을 흐리게 하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 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솔직하게 반성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해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